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1996. 5.

金 永 椿 (國際硏究室 硏究委員)
余 仁 坤 (國際硏究室 硏究委員)
金 國 新 (國際硏究室 責任硏究員)
崔 春 欽 (國際硏究室 責任硏究員)

民族統一硏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硏究院의 硏究計劃에 依據한 自體硏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硏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硏究院 國際硏究室

- 目 次 -

Ⅰ. 問題提起 1

Ⅱ. 韓·美 頂上會談 3

1. 開催背景 3
2. 會談內容 3
3. 會談의 意義 4

Ⅲ. 美·日 頂上會談 6

1. 開催背景 6
2. 「美·日 新安保共同宣言」內容 7
3. 會談의 意義 8

Ⅳ. 美·러 頂上會談 10

1. 開催背景 10
2. 會談內容 11
3. 會談의 意義 13

Ⅴ. 中·러 頂上會談 15

1. 開催背景 15

2. 會談內容 15

3. 會談의 意義 20

Ⅵ. 東北亞 및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21

1. 東北亞 國際秩序에 미치는 影響 21

2.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22

Ⅶ. 우리의 考慮事項 24

Ⅰ. 問題提起

○동북아지역의 탈냉전 분위기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냉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1996.4.16)을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 및 미국, 중국의 4者會談을 제의하였음.

○이어서 미·일 정상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북한의 정전협정 불인정 선언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 등 동북아 정세의 不確實性에 대처하고 아·태지역에서의 안보역할을 분담하기 위하여 「新安保共同宣言」을 발표(4.17)하고 양국의 안보동맹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냉전종식 이후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익상충으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核安全 頂上會談」(4.19~20)과 양자간 실무정상회담(4.21)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의 핵안전과 보안문제 및 양국간 懸案을 논의하였음.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4.25)을 개최하고 미·일 신안보동맹에 대응하여 「戰略的 同伴者關係」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연쇄적으로 개최된 한·미, 미·일, 미·러, 중·러 정상회담의 내용 및 의의 등을 살펴보고, 미·일·중·러의 4者關係 再定立이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Ⅱ. 韓·美 頂上會談

1. 開催背景

○ 제네바 핵합의(1994.10.21) 이후 미·북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남북간에는 膠着狀態가 계속되고 있음.

○ 한국을 排除한 채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북한은 非武裝地帶 불인정 선언(1996.4.4)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武裝示威를 전개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恣行되고 있는 북한의 軍事的 挑發을 중단시키는 한편, 한국 주도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 정상회담(4.16)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공동선언을 發表하였음.

2. 會談內容

○ 클린턴 미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安保公約을 다짐하고 한·미 안보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하였음.

○한·미 양국 정상은 ① 한반도 평화문제와 미·북 양자간 대화문제를 분리하여 ② 한반도 평화문제는 미국이 앞장서지 않고 한국이 主導하며 ③ 미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해서는 북한과 직접 협의하지 않는다는 3原則에 합의하였음.

○또한 양국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룩하는 과정을 개시하기' 위해 한국, 북한, 중국, 미국 대표간의 4者會談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共同 提議하였음.

- 4者會談에서는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도 토의될 수 있다고 선언하였음.

3. 會談의 意義

○금번의 한·미 공동선언은 미·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排除한 상태에서는 한반도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음.

○4자회담의 공동제의와 함께 한·미간 한반도 평화문제와 미·북관계 개선의 분리 추진 합의는 한·미관계의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의도를 차단하는 동시에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향후 韓·美 共助體制의 유지·강화에 기여할 것임.

○4者會談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남북한은 1992년에 發效시킨 「南北基本 合意書」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主導的인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이 체결한 평화협정의 保障者 役割을 하게 될 것임.

Ⅲ. 美·日 頂上會談

1. 開催背景

○일본내에서는 걸프戰(1991) 당시 2백억 달러의 戰費負擔에 상응하는 국제적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 바, "일본이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오자와(小澤一郎)의 「普通國家論」이 국민들로부터 계속 지지를 받아 왔음.

○한편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 舊소련의 威脅이 消滅되었으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영토분쟁 등 다양한 지역 不安要因들이 대두됨에 따라서 일본과의 실질적인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클린턴 美대통령과 하시모토(橋本) 일본총리는 동경에서 정상회담(1996.4.17)을 갖고 동북아지역의 有事時에 대비하는 방위협력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관여하는 新安保體制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일 신안보공동선언」(「미·일 양국민에게 주는 메세지 - 21세기를 위한 동맹」)을 채택하였음.

2.「美·日 新安保共同宣言」內容

가. 地域情勢에 대한 共同認識 確認

○미·일 양국정상은 최근 아·태지역에서는 역사상 어느 때 보다 繁榮이 확대되어 왔으나, 불안정과 不確實性도 존속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하였음.

-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집중, 영토문제, 지역분쟁 가능성, 대량파괴 무기와 운반수단의 확산 등이 지역내 불안정의 원인임.

나. 美·日 安保同盟 强化

○양국 정상은 미군 주둔이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임을 확인하였음.

- 미국은 현 수준의 駐日 美軍을 포함해 10만명의 병력을 이 지역에 前進配置한다는 점도 재확인하였음.

○양국은 국제정세, 특히 아·태지역에 대한 정보·분석의 교환을 재차 강조하였음.

- 차세대 지원전투기 연구개발 협력을 포함, 모든 기술·장비 분야에서의 相互交流를 한층 강화함.
- 대량파괴 무기와 운반수단의 擴散을 방지하며, 탄도미사일 방위구상 연구를 계속하기로 하였음.

다. 域內國家와의 協力 增進

○양국 정상은 중국의 積極的, 建設的 役割이 지역 안정과 번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양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가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3. 會談의 意義

○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신안보공동선언」은 양국 안보관계를 「從屬的 關係」에서 「실질적 책임을 분담하는 同盟關係」로 전환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음.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은 일본이 그동안 방위정책의 3大 支柱로 삼아온 전수(專守) 방위, 무기수출 3원칙, 비핵 3원칙 중 앞의 두 원칙을 사실상 廢棄한 것을 의미함.

○일본은 美·日 新安保體制를 통해 아·태지역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음.

- 1960년 개정된 미·일 안보조약은 극동지역을 駐日 美軍의 활동 범위로 規定하였는 바, 일본 정부는 이를 '필리핀 이북의 한국

과 대만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해석해 왔으나 금번 선언을 통해 미·일의 공동방위 범위가 아·태지역으로 확대되었음.

- 특히 駐日 美軍의 주둔 목적이 종전의 '日本 有事時'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부터 '極東地域 有事時'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됨으로써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간접적인 개입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은 헌법해석상 금지되어 온 集團的 自衛權 행사문제와 有事時에 대비한 有事立法의 제정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것임.

- 자민당은 이미 헌법을 새로이 해석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신진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合憲'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사민당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는 힘들지만 유사시 對備立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Ⅳ. 美·러 頂上會談

1. 開催背景

○클린턴 美대통령과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선진공업 7개국」(G7),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간의 「핵안전 정상회담」(4.19~20)을 계기로 미·러 실무 정상회담(4.21)을 개최하였음.

○「핵안전 정상회담」과 미·러 실무 정상회담의 開催背景은 다음과 같이 分析됨.

- 옐친 대통령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10주년을 앞두고 세계적 차원의 핵안전 및 보안문제의 협의를 1995년 6월 개최된 G7 연례 정상회담[1]에서 제안한 바 있음.
- 서방 지도자들은 세계 핵안전 대책을 협의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大選(6.16)을 앞두고 옐친정부에 대한 서방측의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공산당의 집권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클린턴 美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미·러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세계 지도자로서의 외교역량을 대내외적으로 誇示함으로써 금년 大選(11월)에서 재집권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1) 러시아는 G7 연례 정상회담에 옵서버로 참여하여 왔음.

2. 會談內容

○「핵안전 정상회담」과 미·러 실무 정상회담에서는 핵안전과 보안 문제, 군축조약의 이행문제, NATO 확대문제, 러시아 國內問題 등이 논의되었음.

가. 核安全과 保安問題 合意

○「핵안전 정상회담」 참가국들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유엔에서 調印될 수 있도록 同 條約을 금년 9월까지 타결하기로 합의하였음.

○핵재난 방지대책의 一環으로서 체르노빌 핵발전소를 오는 2000년까지 폐쇄하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산업을 재편하기 위해 31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이 「핵안전 정상회담」에서 採擇되었음.

○핵물질의 密去來 방지를 위한 국제적 상호협력이 합의되었으나,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내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등 核物質의 안전이 계속 문제시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음.

나. 軍縮條約 履行에 대한 異見縮小

○미국과 러시아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1972) 과 「유럽

재래식무기(CFE) 협정」(1990) 등 군축조약의 이행문제에 있어서 상호간 견해차를 縮小할 수 있었음.

-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 방위계획이 ABM 조약에 배치되는지에 관해 미·러간의 異見이 좁혀졌음.[2)]
- CFE 협정의 장애요인인 北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병력배치 문제가 금번 정상회담을 契機로 타협될 가능성이 커졌음.

다. NATO 확대문제에 대한 異見 再確認

○미국과 러시아는 NATO 확대문제와 관련, 가장 현격한 意見差를 보였음.

- 옐친 대통령은 미국과의 실질적 同伴者關係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치 블럭인 NATO의 동구 및 구소련 공화국들로의 팽창을 러시아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看做,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披瀝하였음.
- 반면 클린턴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의 NATO 가입을 반대할 수 없고, NATO 확장이 러시아의 안보에 威脅을 주지 않는다는 서방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였음.

---

2) 클린턴 美大統領은 「ABM 조약」에 의해 허용되는 무기체계와 허용되지 않는 무기체계를 구분, 옐친 대통령에게 說明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2, 1996, p. 8.

라. 옐친의 改革政策에 대한 支持

○ 클린턴 대통령은 옐친 대통령의 指導力 下에 이룩된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개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가노프 공산당 당수의 집권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表明하였음.

○ 또한 클린턴 대통령은 체첸사태의 平和的 解決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미국의 남북전쟁과 비교하여 체첸전쟁의 正當性을 강조하는 한편, 체첸공화국은 러시아의 일부라는 옐친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였음.

3. 會談의 意義

○ 금번의 「핵안전 정상회담」은 옐친 대통령이 G7과 대등한 자격으로 참석한 최초의 G8 회담이었음.

- 개혁정책의 부작용과 체첸사태 및 심장병 등으로 인기가 하락되었던 옐친 대통령은 이를 통해 大選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立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금번의 「핵안전 정상회담」을 통해 핵무기 확산위험과 핵재난 방지 및 핵안전 문제 등을 최초로 共同 提起하고 논의하였음.

- 특히 금년 9월까지 CTBT의 타결을 約束한 점은 「핵안전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지도자들은 정상회담의 비중을 옐친 대통령의 재집권을 위한 政治的 考慮에 두었던 바, 러시아 핵원자로의 안전과 핵물질 밀거래의 통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정하지 못하였음.

○ 러시아의 南部 우랄지역 군사단지 건설 문제 등 마찰을 惹起할 수 있는 미·러간 주요 외교 및 안보현안에 대한 논의가 留保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양국 정상의 이해일치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V. 中·러 頂上會談

1. 開催背景

○금번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訪中은 자신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중·러 정상회담[3]을 개최하기 위한 것이었음.

○옐친은 금년 6월로 예정된 大選을 앞두고 중국 방문을 통해 국정수행 능력을 誇示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이상에 대한 대내외적 의혹을 不息시키고자 하였음.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NATO의 동유럽 확대 등 미국 주도하에 전개되고 있는 국제질서 개편 움직임에 共同對處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음.

2. 會談內容

○중·러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관계를 「戰略的 協力·同伴者關係」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覇權主義」에 대한 우려를 表明하는 동시에,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

3) 중·러 정상회담은 원래 1995년 11월로 計劃되어 있었음.

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합의에 立脚하여 양국은 14개 협정문안에 서명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國境問題의 공정한 解決合意 및 「상해협정」 締結

○ 중·러 양국은 「중·소 동부국경협정」(1991.5)과 「중·러 서부국경협정」(1994.9)을 엄격하게 준수하기로 合意하고,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일부 국경선 확정문제는 대화를 통해 공정하게 解決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음.[4)]

○ 아울러 중·러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크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정」(「上海協定」)을 체결(4.26), 체약국이 접경선에서 100Km씩 군대를 後方으로 철수시키고 同 地域內 병력 집결과 훈련을 事前 通報하기로 합의하였음.

나. 軍事協力 擴大

○ 중·러는 劉華淸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訪러時(1995.

4) 중·러간 국경선은 약 4,356Km(동부국경선은 4,300Km, 서부국경선은 약 56Km)로서, 이중 黑龍江 유역의 약 60Km가 쌍방의 이해대립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있음.

12) 합의된 약속에 따라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음.

○특히 중·러는 러시아제 수호이-27 전투기 24기 추가 구매와 라이센스 생산문제에 合意하고, 잠수함과 미사일 防水시스템 및 신형 공격기 슈퍼7의 共同開發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음.

- 중국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로부터 수호이-27 전투기 26기, 디젤잠수함 1척, 미사일 防空시스템(S-300) 4기 등을 구입하였음.

다. 內政不干涉 原則 確認

○양국 정상은 대외관계를 「平和共存 5原則」에 입각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대만문제와 체첸문제가 內政問題라는 상대방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음.

○이와 관련, 중국은 체첸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진압 정책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러시아도 대만과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대만과 공식 관계를 締結하지 않을 것임을 確約하였음.

라. 大量 殺傷武器의 확산방지 努力

○양국 정상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과 CTBT의

조속한 체결 및 화학무기협약의 早期 發效 등에 대해 지지의사를 발표하였음.[5]

○모스크바 「핵안전 정상회담」과 미·러 정상회담시 핵보유국들이 1996년 9월까지 CTBT의 타결을 약속하였으나, 중국은 同 條約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여 왔음.

- 따라서 옐친 대통령은 CTBT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誘導함으로써 서방국들에게 러시아의 평화적 이미지를 浮刻시키고자 하였음.

마. 아·태지역내 美國의 覇權 牽制

○중·러 양국은 미·일 신안보체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覇權主義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음.

○중·러가 미·일간 안보동맹 强化 趨勢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게 된 것은 중·러간 안보협력 강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우려하였

5) 그러나 중국은 미·러 등과의 핵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CTBT 체결 이전까지 핵실험을 계속 강행하려 하고 있음. Michael Richardson, "China Seeks to Avoid Ban on Nuclear Test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2, 1996.

기 때문임.

- 특히 러시아는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경우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획득하기가 어렵게 되고, 아시아에서 孤立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바. 4者會談에 대한 中國의 유보적 態度와 러시아의 不滿

○중·러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문에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沈國放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의한 4者會談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음.

○중국은 4자회담 제의가 중국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同 提議에 반대하지 않고 있으나, 4자회담 진행과정에서 미국이 主導權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하여 북한이 수용태도를 보이기 이전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堅持한다는 방침임.

○러시아는 4자회담이 러시아의 참여를 排除하고 있기 때문에 동 제의에 대해 否定的인 태도를 보이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으려 하고 있음.

-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복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한반도에 대한 影響力 回復을 염두에 둔 것임.

3. 會談의 意義

○양국간 마찰의 근원이 되었던 未決 영토문제와 접경지역내 군병력의 후방 이동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는 바, 이번 정상회담은 중·러간 역사적 불신관계를 解消시키는 契機로 작용하였음.

- 양국이 대만과 체첸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지지하였다는 점도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데 寄與할 것임.

○또한 중·러는 軍事協力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는 바,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군사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임.

○중·러가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 대해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국간 안보협력 관계가 同盟的 次元으로 발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示唆하는 것임.

Ⅵ. 東北亞 및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1. 東北亞 國際秩序에 미치는 影響

○미국의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主導的 役割이 지속될 것이며, 미·일간 안보협력 범위가 '日本 有事時'에서 '極東 有事時로 확대됨으로써, 아·태지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展望됨.

○아·태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와 유럽에서 NATO의 팽창추구는 중국과 러시아의 安保利害를 위협함으로써 중·러간 「戰略的 同伴者關係」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러시아는 舊소련 공화국 이외의 국가들과는 군사동맹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도 군사블럭 형성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됨.

○동북아 국제질서가 미·일 신안보체제와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서 역내 軍備競爭이 심화되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을 실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CTBT 締結에 대한 주요한 障碍要因이 될 것임.

2.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4者會談이 성사되어 가시적 성과가 導出되는 경우, 이는 남북관계 진전과 韓半島 平和體制 구축에 기여할 것임.

- 그러나 북한의 수용 거부 또는 사실상 거부차원의 변형된 회담 제의로 4자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과 미국의 4자회담 제의 이후 미·북과 일·북간 접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클린턴 미행정부는 대선(11월)을 겨냥하여 對北制裁 추가완화와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조치와 함께 대북접촉을 多邊化할 것으로 예측됨.
- 일본은 아직까지는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수교협상 재개와 連繫시키고 있으나, 학술·정당교류 형식의 대북 접촉 증대를 통한 일·북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 옐친 대통령은 「핵안전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내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및 기타 핵물질의 안전이 계속 문제시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는 바, 이러한 핵원료들이 북한으로 不法 搬出되는 경우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미국과 일본 對 중국과 러시아라는 새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경우, 이는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對北韓 關係가 제분야에서 擴大·强化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 심화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통해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障碍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새로운 대립구도의 형성은 중·북한과 러·북한간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시킬 可能性이 있음.

Ⅶ. 우리의 考慮事項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단시일내 해결될 事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측의 반응에 구애됨이 없이 長期 전략적인 관점에서 서두름 없이 의연하게 추진함.

- 북한이 실질적으로는 미·북 양자회담과 같은 변형된 형태의 4자회담을 제의할 경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이러한 수정제의를 단호히 拒否하는 입장을 취해야 함.
- 특히 북한의 4자회담 수용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식량지원 및 경협확대 등의 성급한 對北 誘引策 제시를 止揚함.

○ 한편 4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 韓·美共助를 강화하여 미·북간 미사일 및 유해송환 협상 등에서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을 원천봉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4자회담 외의 代案이 없음을 인식하도록 함.
- 중국의 정치·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의 입장을 감안, 한·중외교를 강화하여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설득을 모색함.
- 일본과의 협조하에 일·북수교 교섭시 양국간의 관계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4자회담 受容이 필요함을 북한에 주지시키도록 함.
- 러시아가 4자회담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러간 긴밀한 협조체제 維持·强化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긍정적인 역할이 보장될 수 있음을 인식시킴으로써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함.

○북한이 4者會談을 수용하는 경우,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도록 함.

○한국은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가능성과 중국의 군사력 증대를 牽制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 및 비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多者安保協議體의 창설을 主導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주변 4국의 대립심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러시아 大選(6.16)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옐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의 再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바, 한국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개혁정책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러시아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강화해야 함.

- 옐친 대통령이 재선되는 경우, 러시아가 불만을 갖고 있는 經協分野에서의 한·러협력을 확대함.

○러시아내 핵물질과 군사무기들의 북한으로의 不法 搬出은 한국 안보문제와 直結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防止를 러시아 정부에 촉구해야 함.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91-01 轉換期의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91-03 北韓體制의 變化: 現況과 展望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92-05 轉換期의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93-03 中國의 改革·開放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强의 立場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민족발전공동계획」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研究報告書〉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2-06 軍備統制 檢證 硏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92-07 北韓住民의 人性硏究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硏究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92-11 東北亞 經濟協力의 發展方向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硏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硏究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硏究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3-02 金日成著作 解題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硏究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硏究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硏究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硏究

93-15 金正日著作 解題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硏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93-19 예멘 統合事例 硏究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畵 分析을 中心으로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硏究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硏究(改訂版)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93-26 日本의 核政策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硏究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硏究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94-07 金正日 리더쉽 硏究
94-08 北韓 民族主義 硏究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强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擧制度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硏究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94-20 「조선전사」 解題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94-24 韓國 民族主義 硏究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硏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硏究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硏究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硏究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硏究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硏究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硏究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95-10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95-21 탈냉전기 中·北韓關係 變化 硏究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쵸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옐찐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의 發展方向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94-10 韓·러關系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94-18 美國의 中間選擧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중심으로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96-04 周邊 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 叢〉

統一硏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硏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硏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硏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硏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硏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硏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硏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 料〉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硏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硏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硏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95-01 藏書目錄: 單行本·硏究報告書(追錄 I)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 I)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硏究(上)
94-02 統一文化硏究(下)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周邊 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統一情勢分析 96－04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232－9252, FAX：231－4304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266－0892
印刷日 1996년 5월 일
發行日 1996년 5월 일